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나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다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만원)
가.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을 제출·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1호	1,000
나.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2호	1,000
다.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·해제 또는 본인확인 조치의 내역을 서면,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2호의2	1,000
라.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2호의3	1,000
마. 금융회사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 정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 제1호	500
바.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3호	1,000
사.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 제2호	500

아.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4호	1,000
자. 금융회사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 제3호	500
차. 금융회사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5호	1,000
카.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6호	1,000
타. 금융회사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 제7호	1,000